

촛불과 인권운동-광장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이어지려면

미류(인권운동사랑방)

1. 광장의 정치

1) 광장이 열렸다

2016년 10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장이 열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지는 기운이 맴돌기는 했다. #그런데_최순실은 해시태그가 확산되거나, 백남기 농민의 마지막 길을 정권에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현실이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촛불의 시작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촛불은 체제로 난입했다.

촛불이 광장을 열어낸 후 주말마다 사람들은 파죽지세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세웠다. 보수정치 세력과 보수언론이 촛불에 울타리를 치려는 수작도 먹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모이는 우리’가 주권자이며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을 선언했다. 광장에서 함께 방법을 만들어갔다. 미적거리던 국회를 움직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후 촛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관심이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기춘과 이재용을 구속시켰고 헌법재판소에 자신감을 주었다. 승인할 수 없는 대통령은 끌어내리고야 말겠다는 주권자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 사이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치가 있었다.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부당한 위계와 일상의 부조리들을 고발했다. 혐오에 경고하며 평등한 광장을 만들기 위한 논쟁이 펼쳐졌다. 다양한 행동들이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스티커를 땔 것인가 붙일 것인가 선불리 결론 내릴 필요도 없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서로를 북돋았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에 나가자고 제안하는 조직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하는 정책가가 되었다.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은 함께 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희망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했다.

2) 광장의 정치가 운동에 묻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이견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광장의 과제가 단절을 완수하는 것이라면, 광장 이후의 과제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탄핵 직후의 대선 국면은 통치권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의탁하는 과정이 되어버릴 수 있다. 광장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상의 정치로 이어진들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다를 수 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촛불은 화려했지만 촛불의 이면은 찬란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면에서 비민주주의도 드러났고 직접 민주주의의 행동은 법제도를 통해 작동하기도 했다. 혐오는 반대했지만 평등에 대한 감각은 없었으며 재벌을 규탄했지만 노동은 보이지 않았다. 가능성은 보았지만 가능성의 실체는 모호하다거나 거리감이 느껴지기

도 한다는 인권활동가들의 말은 현재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나 촛불을 타자화하지 말고 촛불을 통해 드러난 현재를 한국사회와 운동의 현재로 읽어야 한다.

박근혜 체제를 넘어서자,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말들이 쏟아졌다. 체제는 말로 넘어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운동의 몸이, 운동들의 관계가 아직 넘어서지 못한 과거의 체제에 놓여 있다. 촛불에서 드러난 여러 모순이나 한계는 당연하다. 체제의 모순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며 체제를 비트는 행동이 진행 중일 뿐이다. ‘운동’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다. 촛불에 대해 묻기보다 운동의 현재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광장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이어지려면 운동부터 스스로를 넘어서야 한다.

2. 부재_운동의 현재

1) 조직들이 없다

광장에는 전사(前史)가 있다. 운동들이 광장을 열고 지켜왔다. 그런데 왜 운동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예측할 수 없었을까?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쌓여있는 분노가 없었다면 절대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겠지만 그 저변에는 일상에서의 분노가 있다. 누구나 말하듯 먹고살기 힘들어진 시대다.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고 모욕과 혐오는 노골적이다. 저항이 거세지기보다는 희미해진 것은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분노를 조직하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운동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는지언정 사람들을 조직하지는 못했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운동들로 포섭되지 않는 대중적 저항들이 나타난다. 2008년 촛불이나 2011년 희망버스는 그해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 1순위에 꼽힐 정도로 사회를 흔들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광장으로 모였던 사람들도 그랬다. 기존의 운동들과 연결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강남역 10번 출구로 모이기 시작한 여성들도 새로운 물결을 형성했다. ‘운동권’에 대한 적대가 드러나기도 하고 운동의 성찰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활동양식이 고루하다거나 가르치려 드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진단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집단행동을 기획할 때에는 과거의 양식을 참조하고 활용하며 때로는 ‘운동권’보다 더 ‘운동권스럽다’. 87년 체제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정한다. 이것은 운동의 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운동의 지형은 대부분 87년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운동은 87년 체제에서 유효하고 적절했던 조직의 내용과 형식을 갱신하지 못했다.

운동에는 조직들이 필요하다.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은 누군가 겪는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드러난다. 착취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이 운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하기도 어렵고 맞서 싸우기도 어렵다.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더욱 아등바등해야 하고 차별당하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것이 두렵다. 억압당하기 때문에 억압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배제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들이 필요하다. 조직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관계’의 장소가 된다. 권리를 빼앗기고도 ‘내 탓’이라는 세상에 짓눌려 언어가 되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위로하고 용기를 나누는 관계가 있을 때 저항이 가능해진다. 87년 체제 이후 건설된 대중조직들은 그런 장소였고 여러 운동들의 관계 속에서 체제에 맞서는 저항을 조직해왔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서로 기대며 광장으로 나왔고 광장 이후에도 새롭게

발견한 관계들을 이어가려고 기대할 것이다. 운동의 조직들은 체제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분출하는 대중의 힘을 조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형성된 조직들의 내용과 형식이 대중의 경험과 분노로부터 미끄러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 민주주의가 없다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인권활동가 박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운동의 현재를 일갈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하려고 했는데 운동 안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없더라.” 서로 의견을 내어놓으며 배우고 합의해가는 노력보다는 내놓은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데 힘을 쏟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대표성을 얻어가기보다는 명망을 안배하는 대표성에 관심이 크다. 기존의 조직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온 이유 중 하나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 상황이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어서 위계가 문제를 정리하고 갈등과 반목이 이어진다. 조직들이 힘을 불리는 방식도 민주적이지 않다. 의제를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보다 선 굵기에 익숙하다. 토론이 의미 없어지고 점차 토론 자체가 사라지고 편견만 쌓여간다. 대표의 명망과 역량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데에는 미숙하지만 대표의 명망을 통해 힘을 모으려는 경향은 강해진다. 운동을 대표한다는 얼굴이 뻗은 이유다. 운동에도 반칙이 있고 특권이 있다. 전략과 전술 논의를 거래와 협상이 대신한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주된 동기는 아니지만, 조직의 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를 구성하며 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반칙과 특권에 분노했다. 개인적 이해관계만 챙기며 권력으로 농간을 부리는 자들의 세대가 드러났다. ‘저걸 깨야겠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세상을 바꾸고 싶은 조직들이라면 스스로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조직 안에서 다른 세상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때 함께 저항할 수 있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조직이라면 모두의 노동을 소중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성차별적인 업무 분담이나 관계노동의 부차화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채로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성낼 줄은 알지만 웃을 줄 모르는 운동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3) 변혁 담론이 없다

사람들의 경험과 불만을 저항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87년 거리에서 그것은 ‘민주화’였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려는 지금 운동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박근혜 퇴진 국면을 지나면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할 방법, 공안기구의 횡포를 막을 방법,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방법, 재벌의 독점을 깰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법과 제도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되는 권력이 지향해야 할 가치나 방향은 무엇일까? 민중이 권력을 통제한다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중이 말하지 못한다면 민중 통제는 의미가 없다.

87년 체제에서 시도되었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한 시대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저물었다. 운동의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책만 남았다. 97년 IMF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 동안 운동들은 제도화에 많이 기대왔다. 제도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법이나 제도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어느 순간 제도 외에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촛불을 통해 쏟아져 나온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한 대안은 ‘다른 정치’를 건너 뛰고 입법과제로만 나열된다. ‘다른 정치’가 없으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치는 이념과 정책을 세우는 과정이며 집단적 힘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행위다. 지금 없는 것은 이념과 정책을 갖춘 변혁 담론이다. 체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지만 그것에 쐈기를 박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혐오가 심화되지만 그것에 맞서는 힘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면서 저항을 모색하는 틀이 변혁담론이다. 사상과 이념이 희미해지는 것은 사상이 없어서도 아니고 낡아서도 아니다. 현실에서 뒹굴지 않기 때문이다. 양상한 주장과 정형화된 도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규합할 수 없다. 탄핵 이후 대선 국면을 거치며 광장의 힘은 운동에서 제도정치로 급격히 쏠릴 것이다. 정치세력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은 정당의 부재와 다르며 대선에 후보를 낸다고 해소되지도 않는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정당 건설이나 제도정치 진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목표였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집단적 정치주체가 되자는 것이었다. 2017년 이후의 운동은 변혁담론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며 정치세력화에 관한 전망을 내고 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대중의 힘이 움직이는 만큼 세상은 변화한다. 운동은 그런 힘들을 조직하며 어디로 나아갈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사회와 인권운동

1)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지구적 체제의 위기와 닮아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기도 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본주의도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저항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진보정당이나 운동세력이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도 유사하다. 보수정치가 혐오를 조직하며 극우화되는 경향도 전지구적이다. 앞서 살펴본 운동의 현재가 운동의 한계만은 아니다. 운동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촛불의 현재를 통해 운동의 현재를 볼 때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비관할 이유도 없다. 운동들의 부재 속에서도 체제를 흔드는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이야말로 역사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촛불의 현재에는 운동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광장의 전사(前史)들은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체제의 부조리와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던 운동들이 있다. 차별에 맞서고 혐오를 경고했던 운동들이 있어서 광장이 조금 더 평등해졌다. 매주 주말마다 수십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주관하는 것도 운동의 경험을 통해 가능했다. 주말 집회와 집회 사이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재벌에 맞서 싸우던 운동들이 있었고 기필코 단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직접행동을 이어간 퇴진행동의 노력이 있어서 이재용도 구속될 수 있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달라며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런 토론 속에서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백만 명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니다. 기존의 조직들이 힘겨운 조건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백만의 감동을 만들 수 있었다.

<페미니스트 모멘트>에서 전희경은 자신의 여성주의 운동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관계가 깨져도 페미니즘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운동이 깨져도 체제를 변혁하려는 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 기존의 운동에는 이어가야 할 자산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운동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만큼 체제의 변혁도 가능해질 것이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현재를 직시하고 2017년 이후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2) 인권운동의 도전

인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운동의 현재’가 아니라 ‘운동의 현재’를 살펴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권운동도 운동의 역사와 현재 속에 존재한다.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이 형성된 것은 90년대 이후다. 87년 체제의 효과 속에서 수많은 대중조직들이 건설되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인권의 제도화가 진전했다.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 설립 농성 등을 통해 제도화의 힘을 체제에 호락호락 넘기지 않았다. 개혁 정권의 등장으로 운동들의 태도가 모호해질 때에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양한 인권 의제를 사회에 내놓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인권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운동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들 전반이 침체하는 시기는 인권운동도 고전을 면하기 어려웠다. 인권침해를 고발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정권은 손쉽게 무시했다. 운동의 기획을 입법의 구상이 대신하는 경향도 커졌다. 제도는 있으나 인권은 없다.

사실 ‘인권운동’이 뭐라고 정의하는 것부터 어렵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라면 ‘인권단체’의 운동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 ‘인권단체’들도 저마다 다르다. 대중조직의 성격을 띤 단체도 있고 활동가조직도 있다. 다루는 주제는 사회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단체들마다 활동 양식도 다양하다. 그래도 인권운동이라 불리는 운동들은 ‘인권’을 운동의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다. 운동들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지만 인권운동에서는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꾸준히 실험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각 덕분에 일상의 미시적 권력 관계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그래서 덩치가 큰 조직들이나 거대 담론에 대한 거리감도 있는 편이다. 광장에서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겉도는 이유도 비슷할 것이다. 지금은 구분하는 것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때다.

4. 바뀌어야 한다, 인권운동이 함께

1) 운동 전체의 전망 속에서 인권운동의 전망을 찾자

대선 국면이 되면서 야당 후보들의 행보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종북’과의 선 긋기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야 이미 오래 전부터 여야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야당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진하고 ‘인권’의 이름을 단 정책들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만들어왔다. 보수정권 10년의 역사를 거치며 야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도 내지 못하고 ‘종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표를 얻으려는 세력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도 스스로 종결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인권현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이념이다. 그러나 잘 지배하는 법이나 잘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운동의 목표는 아니다. 대선과 함께 시작될 개헌 국면 역시 운동이 자신을 종잇장에 박제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법안을 제안해도 인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다면 바뀌지 않는다. 두 달 여 동안 온 국민이 대선 후보들을 쳐다보다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때 광장의 흔적은 어디에 어떻게 남게 될까? 운동이 광장의 열기를 대선 후보들이나 개혁 과제로 수렴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가와 조직가가 되었던 경험들을 운동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2017년 이후의 운동은, 다시 대중의 불만과 경험을 조직화하며 세력화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해야 한다. 멀리 돌아보고 길게 내다봐야 한다. 운동이 87년 체제를 넘어서 수 있을 때 한국 사회도 다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운동들 서로가 서로의 임계치를 넘겨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각자의 운동을 다른 운동들에 비추어볼 때 운동이 넘어서야 할 모습도 보이고 넘어서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그리고 서로 보탬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인권운동들 안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운동들과의 교류와 교차도 필요하다. 서로 넘나들면서 세력화해야 한다. 체제가 바뀌어 가는 속에서 인권의 실현도 가능해지며 인권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체제도 흔들린다.

2) 평등과 연대에 대한 사회적 감각을 복돋자

혐오는 한국사회만 직면한 현상이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미래로 내세우던 국가들이 실패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며 정치 위기를 넘어서려는 경향은 전 지구적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극우 정치인이 앞장서 선동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움직여 사회의 여러 현안들을 왜곡하고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다. 혐오가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 놓여있지만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혐오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기 위해 선동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배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을 삼고 있다.

혐오에 맞서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출발선이다. 혐오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인권을 향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미 혐오세력은 ‘성적 지향’을 빌미로 인권의 제도들을 흔들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용인될수록 한 사회의 인권에 대한 감각은 희미해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혐오세력에 맞서기 위해 운동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평등과 연대에 대한 사회적 감각을 퍼뜨려야 한다.

인권운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통해 접근해왔다. 또한 주로 국가폭력을 매개로 노동운동과 만나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나 청소년 노동권 등 의제를 확장해왔다. 지금은 조금 더 폭넓은 시야에서 ‘노동’을 봐야 할 때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생계비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노동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권리 영역의 분할에 앞서 모든 사람이 존엄할 수 있는 생산관계가 어떻게 가능할지 탐구해야 한다. 평등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담론을 버려야 한다.

3) 인권의 조직들을 만들자

오래동안 인권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인권의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이었다. 그런데 이것의 모습은 무엇일까? 인권단체들에 회원이 늘어나는 것일까? 인권운동이 스스로 대중운동이 되는 것일까? 사실 인권운동이 대중화되기란 쉽지 않다. 추상적인 인권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연결감을 줄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방법을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권운동은 대체로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사회가 잘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은폐되는 인권침해 사건을 고발한다. 당장에 다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인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인권운동이 독자적으로 대중을 조직한다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되기 어렵다.

인권의 사건들은 따로 있지 않다. 흔히 사회적으로 ‘인권’의 사건들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폭력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인권운동은 인권의 사건들을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왔다. 누군가의 존엄이 훼손될 때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강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 자신이 겪은 부당한 상황에 맞서게 될까? 조직들을 통해서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의 본질은 서비스가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주는 사람들, 사회의 문제로 해석하고 해결을 함께 모색해주는 사람들 그 자체다. 일상에 이와 같은 인권의 조직들이 더 많아질 때 인권운동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도, 농민회도, 여성들의 커뮤니티도, 성소수자나 청소년 단체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을모임도 모두 인권의 조직들일 수 있다. 더욱 많은 조직들이 인권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조직들을 만드는 전략이다.

더욱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조직들이 인권을 조직의 지향과 운영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집회와 결사가 더욱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법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떤 조직들이 가능할까 탐구하면서 함께 조직해보자.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은 인권운동의 강점이기도 하다. 회원모임이나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들은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교류하고 교차할 수 있는 기획을 하면서 평등과 연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조직들에 민주적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조직들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이 깃드는 만큼 인권의 이야기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